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및 사법부가 함께합니다.

-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이하 지원단체)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26. 9. 8.(화) 3차 회의를 개최(1차 회의 '26. 6. 12. / 2차 회의 7. 28.) 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부터는 법원 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회장 유현영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원 연구회)'가 협의체 일원으로 여성폭력 입법 개정을 위해 참여하였습니다.

※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초대 회장 오경미 대법관)는 2021년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신종 성범죄 대응 및 재판 실무 개선을 위해 창립된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

< 협의체 구성 배경 >

법무부는 '26. 5. 11.,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입법상황 파악 및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기로 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법무부·성평등가족부·여성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함.

협의체 1차 회의(6. 12.)에서는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성폭력처벌법 상 용어 변경, 친밀관계 폭력 법률체계 정립, 성매매처벌법 개정 등 여성폭력 입법과제에 대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및 지원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차 회의(7. 28.)에서는 프랑스 형법 개정 전후 수사 기소 사례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법무부·성평등가족부가 공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지원단체에서는 현장 피해사례 유형 및 데이터를 통해 여성폭력 입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26. 6. 26.(금) 영상회의를 통해 산드린 미라벨로 검사(프랑스 알레스 지방법원 검찰청)를 초청하여 “프랑스 형법 개정 전후 강간죄 수사 및 기소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고, 전윤경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프랑스 형법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및 그 시사점”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함.

이 날 개최한 3차 회의(9. 8.)에서는 “일본 형법 개정 전후 강간죄 수사 및 기소 사례”를 주제로 사토 요코 교수(세이케이대학교)는 ‘성범죄에 관한 형사법 검토회 및 법제심의회 형사법 분과회의 논의 내용과 개정 의의’를 발표하고, 다토코로 유우 대표(사단법인 SPRING 공동대표, 지원단체 간사)는 ‘법무성을 중심으로 한 성범죄 관련 형법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조정민 부장판사(법원 연구회 간사)가 토론을 하였습니다.

※ 일본은 법무성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강간죄 구성 요건 명확화’ 등 형법 개정안을 마련(시행 '23. 7. 13.) 하였음.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여성폭력 입법과제 협의체 회의를 통해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법원 연구회가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입법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협의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 및 참석자>

단체명	참석자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상임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전다운 여성인권위원장(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대표

<사법부>

소속(연구회)
법원(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행정부>

소속	관련 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여성아동인권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성폭력방지과, 폭력예방교육과,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디지털성폭력방지과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 담당관실	책임자	담당관	장인자	(02-2110-3993)
		담당자	사무관	김원경	(02-2110-3997)

□ 협의체 개요

- (배경)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면담(‘26. 5. 1.) 후 각 단체 요구 사항에 대한 입법상황 점검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 추진
- (구성) 6개 지원단체, 사법부(연구회), 행정부(법무부, 성평등가족부),
 -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장애여성 공감 성폭력상담소
 - (사법부) 법원 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 (행정부) 성평등가족부(권익정책과, 성폭력방지과, 친밀관계폭력방지과, 폭력예방 교육과, 디지털성폭력방지과), 법무부(형사법제과, 여성아동인권과, 양성평등정책 담당관실),

□ 추진 경과

- 5. 11. 장관님-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면담
- 5. 12. ~ 6. 11. 지원단체 요구에 따른 협의 대상 입법과제 선정* 및 소관 부서 의견 검토 등
 - * ❶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❷성폭력처벌법 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삭제
 - ❸친밀관계 폭력 법률체계 정립 ❹성매매처벌법 상 ‘성을 파는 사람’ 비범죄화
- 6. 12.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
- 6. 26. 프랑스 형법 개정 전후 수사·기소 사례 공유회(영상회의)
 - ※ 발제 : 산드린 미라벨로(프랑스 검사) / 전윤경(한양대 법전문 교수)
- 7. 28.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방안 공유(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및 현장 피해사례 유형 등을 통해 본 개정 방향(지원단체) 제언 등